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 불평등 편

발행 | 2012년 10월 29일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상수동 6-1번지 302호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인터넷 사이트 | <http://saesayon.org>

이메일 | edu@saesayon.org

책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 불평등 편 -

[여는 글]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불평등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알려져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터키의 재무장관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케말 데르비스, 영국 아카데미의 로버트 스키델스키 등의 세계적 석학들이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했다. 그만큼 불평등이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석학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불평등이라고. 국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평등과 불균형은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적게 갖게 되는 양극화의 상태를 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 경제가 선순환하여야 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99%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물건을 구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고 성장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결국 모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가속화하며,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린다.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최근 전세계에서 나타났던 99%의 점령운동이다. 스티글리츠는 마침내 세계가 들고 일어나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99%운동을 지지했다.

이제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묻혀 살짝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경제학은 물론이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평등과 연대, 공공성을 앞세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12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이수연

전체 목차

- ◆ 여는 글 ----- 3

- ◆ 나쁜 사회, 꿈을 빼앗는 불평등 ----- 7
 나쁜 사회 / 로버트 스킨델스키

- ◆ 99%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 11
 99%가 깨어나고 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 ◆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 ----- 21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 / 케말 데르비스

- ◆ 소비자과 투자자 vs 노동자와 시민, 당신은 누구 편? ----- 24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 / 로버트 라이시

- ◆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 28
 불평등의 덫 / 케말 데르비스

- ◆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 32
 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	36
세계 중산층의 진출 / 요하네스 저팅		
◆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	40
경기회복 여부는 중산층의 구매력에 달렸다 / 로버트 라이시		
◆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	45
유럽에서의 불평등,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카를로 밀라니		
◆ 지금 시대 행복의 조건은 평등	-----	50
행복은 평등이다 / 로버트 스키티스키		

나쁜 사회, 꿈을 빼앗는 불평등

2012.08.04 | 이수연_세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유럽 재정위기를 두고 채무국가의 빚을 과감하게 탕감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주장했던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워릭 대학교의 정치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영국 아카데미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케인즈 전기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30~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특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예로 1970년대 미국 CEO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가 30배였으나 오늘날에는 263배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이를 옹호하는 논리도 강화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쟁시장의 완벽함이며, 임금은 개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류경제학의 논리이다. 즉, CEO의 한계생산성은 일반 노동자보다 263배나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키델스키는 개인의 한계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현실에서 임금은 비슷한 직종의 임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도덕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앗기 때문에 문제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았다.

나쁜 사회 (Bad Society)

2012.07.19

로버트 스킨델스키(Robert Skidelsky)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불평등은 어느 정도나 용인될 수 있을까? 세계 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용인되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랬다. 신노동당의 피터 맨델슨(Peter Mandelson)은 지난 30년 간 “더러운” 부를 모은 사람들에 대해 매우 “관대해졌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신 경제”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전부였다. 새로운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점점 늘려갔다.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도록 세금은 줄었으며, 과이를 더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노력은 사라졌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1970년대 미국 CEO의 세전수익은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수익보다 30배 많았다. 오늘날은 263배 많다. 1970년대 영국 최고 CEO들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금은 노동자들보다 47배 많았다. 2010년에는 81배 많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상위 20% 부자의 세후소득은 하위 20%보다 5배 빠르게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4배 빠르게 증가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과 미국에서 평균 소득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40년 동안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1980년 이후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은 물론이며 국가 간 불평등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불평등 정도가 회복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약화되었다. 개발도상국이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의 성장을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흔들리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경쟁 시장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 최고 CEO들은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보다 미국 경제에 263배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도 정부와 노동조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 덕분에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더 빠르게 트리클 다운 하는 부를 갖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한계세율을 깎는 것뿐이다. 아니면 가난한 이들의 인적 자본을 향상 시켜서 그들의 고용주에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한다.

경제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소득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계산 방법이다. 하지만 여럿이 협동하는 생산 활동 속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의 한계 생산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최고 급여는 그저 유사한 직업의 다른 최고 급여와 비교하여 결정될 뿐이다.

과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 격차가 결정되었다.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급여를 받았다.

그리고 최고와 최하 사이의 격차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유지된다. 상위 기업의 월급이 평균 임금보다 20~30배 이상 많은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그리 크게 나지 않았다. 의사나 변호사의 소득은 제조업 노동자보다 5배 정도 많았을 뿐이다. 오늘 날처럼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 활동의 가치에 대해 계산하는 상식적이고 비경제적인 방식이 깨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잘못된 방식이 등장했다.

가격으로부터 가치를 구별하는데 실패하여 만들어진 이상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뿐이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이것이 타당할 수 있다. 나눌 만한 충분한 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소득을 1% 올려주려면 경제는 3%씩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일반 대중의 인적 자본이 막대한 부, 유리한 가족 환경과 인맥 등에 의해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얻는 소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방법은 없다. 이런 환경에서 더 광범위한 소비의 기반을 얻기 위한 안전한 길이 바로 재분배이다. 또한 재분배 자체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부자, 더 부자, 슈퍼 부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부를 얻는 식으로 진행되는 끝없는 경제적 성장의 반증이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잘못이며, 실질적으로도 좋지 않다. 도덕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은

삶이란 저멀리에 있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결합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99%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2012.05.11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2011년 노벨상 수상자이며, 아마 살아있는 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한 이 중 한 명이라고 할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써왔다. 최근에는 월가 정령 시 위에도 함께하면서 더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래 글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잘 드러난다.

꽤 긴 아래의 글에서 스티글리츠는 월가를 비롯한 전세계의 시위대들이 분노한 것은 '불공정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가진 자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정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는 금융자본이 벌인 약탈적 행위 뿐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기업의 모든 행동까지를 의미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회사나 환경을 파괴하는 화학회사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은행은 구제해주면서 고통받는 실업자와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 역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런 분노는 나아가서 내가 선출한 정부가 나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티글리츠는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 이 두가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지

지지를 얻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감하게 하고 있다.

또한 시위대가 바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에서의 개혁 뿐 아니라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스티글리츠는 근본적으로 정치 체제의 변화에 더 강한 방점을 찍고 있다. 돈이 아닌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공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로 귀결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경제학자의 글을 읽는다는 느낌보다 정치가의 연설문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그에 호응하는 99%의 함성도 들리는 것만 같다.

99%가 깨어나고 있다 (The 99 Percent Wakes Up)

2012.05.02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더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

불평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랍의 봄은 세계 자본주의가 흔들리면서 비롯되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말한다.
마침내 세계가 들고 일어나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사에는 그런 시기가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며 변화를 요구하는 때 말이다. 혼란스러웠던 1848년과 1968년이 그러했다. 2011년도 확실히 그런 시기이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 소득 분배,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드러났다. 지금의 체제가 공정하지 못하며 심지어 이미 붕괴되었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1848년과 1968년은 모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2011년도 그럴 것이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현대화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세계화는 사람들의 생각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것을 도왔다. 북아프리카 해변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의 봉기는 이웃 국가인 이집트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중동, 스페인, 그리스, 영국, 월가 등 세계 각지의 도시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항의 불꽃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가라앉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작은 저항들이 사회적 대변동을 재촉하더니 이집트의 무바라크(Hosni Mubarak),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Qaddafi) 등을 비롯한 정부와 정부 관료들을 끌어내렸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독재정권 하에 있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젊은이들이 봉기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 곳에서는 더 이상 민주적 절차를 통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문제는 서구에서 선출된 정치세력 역시 실패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정치적 절차에 대한 엄청난 각성이 일어났다. 2010년 미국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20% 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매우 높았던 실업률과 연결되어 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we believe in)”를 약속했다. 하지만 재임 후, 지금의 경제적 재앙을 초래한데 책임이 있는 관료들을 기용하여 이전과 똑같은 경제 정책을 펼쳤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을 희생시키는 기성세대와 사회 지도층에 지쳐있었다.

하지만 월가점령 운동의 젊은 시위자들, 그리고 함께한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와 교사들 속에 희망의 징조가 있다. 시위자들은 혁명가나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선거를 통한 절차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체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다.

스페인 젊은이들의 시위대 이름은 ‘분노한 사람들(Los Indignados)’인데, 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사람들은 매우 분노한 상태다. 미국 시위대의 슬로건은 “99%” 였다. 이 슬로건을 든 시위대들은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체제를 비판했다. 이는 내가 2011년 초 베니티 페어(Vanity Fair)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 글에서 나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각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를 인용했다. 연구에 의하면 상위 1%의 사람들이 부와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소득의 20%를 차지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자리의 부족과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와 정치 체제로부터 배제된다는 생각이 분노의 원인이 되었다. 이집트의 활동가 내불시(Jawad Nabulsi)는 지금의 사회 체제가 상위층에 편향되게 형성되어 온 과정을 담은 글을 썼다. 그는 무바라크 통치 하의 이집트에서 가장 문제였던 ‘공정성’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시위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다. 튀니지나 이집트 등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일자리를 얻으려면 정치적 커넥션이 필요하다. 미국은 조금 더 공정해보이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럴 뿐이다. 최고의 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부자 부모들은 자녀를 최고의 유치원, 최고의 초등학교, 최고의 고등학교에 보낸다. 그들의 자녀는 명문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상류층 학교 대다수에서 학생들은 거의 상위 25%에 속한다. 반면 하위 50% 이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경험과 훈련을 얻기 위해서는 인턴십이 필요하다. 좋은 인턴십을 구하려면 인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인턴십 기간 동안에도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필요하다.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서 ‘불공정’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만들어냈다. 지금의 경제 체제가 불공평하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과거에도 느꼈던 문제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지금 체제의 분배 방식, 즉 누구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누구는 낮은 소득을 받아야 하는 방식은 언제나 문제가 되었다. 불평등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불평등이 필연적이며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커져갔다. 소득 불평등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풀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루 지난다고 해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 이웃에서 브프라임 모지기로 인해 버려진 집이 있다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몇 달 사이 빈 집에는 관목과 잡초가 빠르게 자라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변화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진행되어서, 이제 불평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계급투쟁을 겪어보지 않은 미국에서조차 상위층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하며, 적어도 낮은 세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류층 일부는 자신들이 힘들게 일해서 부를 이루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권리라고 믿겠지만 실제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많은 부자들이 이를 깨닫고 있다.) 가난한 이들 중에도 부자들보다 더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이들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 받을 기회,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그들의 경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물을 길어오고, 연료를 찾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다. 선진국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종종 운이 좋아서 좋은 때,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11년 시위자들이 분노한 것은 단지 악화되는 불평등 때문만은 아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이들이 있다는 점도 분노를 자극했다. 바로 불공정이다. 불공정은 튀니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랍의 봄을 가져오게 만든 것처럼 미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월가를 점령하게 만들었다. 만약 누군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그 결과로 막대한 소득을 벌었으며, 그것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가 그만큼의 몫을 받는 것은 공정하다. 심지어 그가 생산된 성과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해도 그만큼 기여했다면 괜찮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한계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옹호한다. 즉, 한계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위기가 지난 후, 은행에서 일하던 이들은 막대한 보너스를 받으면서 직장을 나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은행들의 무분별하고 약탈적인 대출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는다. 이는 매우 심각하게 불공정하다. 정부는 은행을 위해서 구제 금융을 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실업보험 확장은 꺼리고 있으며, 집을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심각하게 불공정하다.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이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불평등을 옹호하는 정의는 이런 문제를 무시한다.

은행가들은 사회와 심지어 그들의 회사에조차 피해를 주었지만 많은 보상을 받았다.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들의 회사를 망하게 한 CEO들도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면 문제는 분명 경제 체제 안에 있다. 이는 당연한 결론이며 시위대들이 분노한 이유이다. MIT의 실베이(Susan Silbey) 교수는 통 속에 썩은 사과 하나 정도는 들어있을 수 있지만, 통 자체가 썩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도덕적 결핍이라는 말로 문제를 설명한다.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소수의 내부고발자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린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변한 사회 그 자체이다.

시위대는 우리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분노를 통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들은 대체로 이상적인 경향이 있는데 학교에서의 교육과 정치적 수사에도 이런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를 읽으며, '충성의 맹세(역주 - 미국식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암송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를 약속하고 믿고 있다.

시장 실패

기업에 대한 불만은 매우 많고 오래되었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는 그들의 위험한 상품을 더 중독성 있게 만들어 내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국민들에게 담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설득하며, 그 반대의 증거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 기업 엑손은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심지어 미국 국립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조차 다른 많은 과학단체와 함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화학 회사는 물을 오염시키고, 그들이 공장을 확장할 때마다 따르는 죽음과 파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다. 제약 회사는 그들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상품 생산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금융위기는 더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가난한 이들은 약탈적 대출로 고통 받는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잘못된 신용 카드 사용으로 고통 받는다. 경제는 여전히 금융 분야에서의 범죄로 인해 비틀대고 있다. 석유 기업 BP의 석유유출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들의 무분별한 석유 채굴은 환경을 파괴하고,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하지만 위기 전에도, 시장 경제가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는 있었다. GDP는 증가하지만 국민 대부분의 삶은 나빠졌다. 정치적 권리에 의해 오랫동안 지켜졌던 경제 법률조차도 지켜지지 못했다. 앞서서 우리는 사회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경제학 이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은행들이 엄청난 이윤을 거두는 것을 본다. 이는 시장이 진짜 경쟁적이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경제학의 표준 과정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말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 같은 이론적 모델에서는 실업이나 신용할당과 같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 정작 필요한 곳에 자원이 쓰이지 못하는 문제(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한 투자,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지구온난화의 위협 앞에서 세계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놓고 있는 자원의 문제(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노동자와 기계)가 존재한다. 2011년 12월, 2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다.

혁신과 세계화는 시장 실패를 유발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경제가 더 번영하도록 해주었지만 또한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켰다.

최근의 조사에서 그린왈드(Bruce Greenwald)와 나는 대공황의 근원을 연구했다. 지금의 농업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급격히 일어나면서 세계의 식량 증가를 요구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1900년 미국에서 노동력의 대부분은 농장에서 일했다. 오늘날 낫은 인구의 2% 미만인 농부들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다. 많은 양이 남아돌아 수출을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929년과 1932년 사이 농작물의 가격은 수직하락했고, 농가의 소득은 3분의 2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의 가파른 감소는 공산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농촌의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고, 대출도 불가능했다.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이주는 늘어났고, 농촌은 텅 비어갔다.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 모두 고통받았다.

대공황의 한가운데에서 미국인 여섯 명 중 한 사람이 풀타임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 가게의 저임금 계산원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혁신은 놀라웠고, 이윤은 증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높은 실업률, 저숙련 노동자의 낮은 임금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

졌으며, 불평등은 커졌다.

정치적 실패

정치 체제는 경제 체제 만큼이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두 가지 실패는 연결되어 있다. 정치 체제는 위기를 막는데 실패했다. 위기를 치료하는데도 실패했다.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도 실패했다. 국민들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도 실패했다. 기업들이 과욕을 막는데도 실패했다. 이렇게 실패하는 동안 적자는 커져가고 있으며, 정치적 실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세계인들은 이 체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위대들은 지금이 진짜 민주주의인지 의문을 던진다. 진짜 민주주의는 2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선택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정치 체제가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로 기울어지고 있다. 정치 체제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실패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버핏(Warren Buffett) 같은 억만장자가 그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도록 만든 투기꾼들은 열심히 일해 소득을 번이들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 이는 정치가 불공정하며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각을 강화시킨다.

정치와 경제에서의 실패는 연관되어 있다. 두 가지 실패는 서로를 강화시킨다. 부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치 체제는 부자들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희생시켜서 부를 늘릴 수 있는 경제 법률과 제도를 만든다.

세계화와 시장

세계화에 대한 나의 비판은 세계화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문제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다. 세계화는 양날의 검이다. 세계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세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성공한 국가는 지금까지 매우 소수이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힘은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엄청나다. 과거 200년 동안 이루어진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전의 2000년을 뛰어넘는다.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유 시장은 대체로 이를 간과한다. 시장은 길들여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장이 국민 대부분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 진보적 시기에 일어난 시장에 대한 조정은 경쟁법 도입이었다. 뉴딜 시기 동안에는 사회보장, 고용,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었다. 월가 점령과 전 세계 시위대들이 보내는 메시지 역시 시장은 길들여져야 하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석유를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룬 중동의 일부에서도 적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카이로에서 월가까지

나는 40년 이상 동안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보았다. 2011년 이후 나는 이집트, 스페인, 튀니지에 초대되었다. 마드리드, 뉴욕, 카이로에서 시위대를 만났으며 테헤란에서 시위에 적극 참여했던 젊은이와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들이 지금의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떤 이들은 시위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런 비판은 시위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 시위대는 선거 절차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경고음이다.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한 편으로는 매우 작은 것들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 양질의 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것, 더 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전혀 혁명적이지 않으며 점진적이다. 하지만 다른 수준에서 그들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시되는 민주주의와 규제를 지키는 시장 경제이다. 이 두 가지 요구는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족쇄 풀린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이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닌 일반 대중의 이익을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정부를 가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 시위자들은 이미 거대한 변화를 이루었다. 많은 싱크탱크와 정부당국자, 언론들이 정당하지 않은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과 시장 실패에 대한 비판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99퍼센트” 라는 슬로건 역시 대중의 의식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랍의 봄이나 월가 점령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젊은 시위대의 목소리가 이미 사회적 공론과 시민, 정치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등

2012.01.11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Global Imbalance and Domestic Inequality)”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세계 무역 거래로 인해 지역 및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와 저축의 괴리현상을 말한다. 주로 중국을 비롯하여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신흥국들은 무역 흑자가 쌓이는 반면, 미국을 비롯하여 수입에 의존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자산 가격 상승과 환율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역 흑자가 과도한 지역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자본이 쌓여간다. 즉, 노는 자본이 생긴다. 이를 두고 아래 글에서는 저축이 늘어난다고 표현한다. 저축이라고 하면 긍정적 의미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자본이 적절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 무역 적자가 과도한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부담 때문에 재정지출과 공공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쉽게 말해 한 쪽에서는 자본이 남아돌고, 한 쪽에서는 자본이 모자라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맥락에서 개인들의 소득 불평등 역시 경기 회복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고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비중은 줄고 저축, 다시 말해 '투자되지 않고 노는 돈'만 늘어나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이 국가 차원에서 자본분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소득 불평등은 개인 차원에서 자본분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경기 회복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 (Global Imbalance and Domestic Inequality)

2012.01.10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글로벌 불균형에 관해서는 이미 몇 해 동안 공론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글로벌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 문제와 함께 다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과 불평등의 관계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신흥국은 내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선진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무역수지 흑자

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터키 등 많은 신흥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으며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무역수지 흑자의 축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선진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신흥국의 흑자를 줄이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2012년의 경우 선진국 독일의 흑자 규모 축소를 통한 유럽 위기 회복은 중국의 흑자 규모 축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중국과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둘 다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잠재 유효 수요를 줄이고, 투자를 초과하는 저축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집중 현상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 회복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외부적인 문제라면, 소득과 부의 집중 문제는 내부적인 불균형이라 볼 수 있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서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이 높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사회 전체에서 더 많은 저축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축을 통해 쌓인 돈을 풀어야 하므로 더 많은 투자와 순수출, 공공지출이 필요하다.

불평등 정도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으로 인해 투자와 지출 보다는 저축이 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물론 정부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가져올 경기 침체를 막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최고소득층에서 나타난 높은 저축률을 상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부채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장려 정책을 폈다. 중국은 수출과 정부의 강력한 투자 지원 속에서 지속적인 팽창이 가능했다.

어찌됐든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와 소득 집중 현상은 둘 다 총 저축량을 높이고, 경기 침체를 가져와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함께 '내부 불균형'을 가져오는 소득 집중도가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소비자와 투자자 vs 노동자와 시민, 당신은 누구의 편?

2012.01.26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의 글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We are all going to hell in a shopping basket)"을 요약 소개한다.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국내에서는 '위기는 왜 반복 되는가'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는 자신의 책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위기의 원인은 소득 불균형에 있음을 주장해왔다.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은 전체적인 소비성향의 감소를 가져와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며,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여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아래 글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라는 표면적 대립에서 한 발 나아가,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립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노동자 또는 자본가로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나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저렴한 물건 뒤에 감춰진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파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이기도 한 것이다.

라이시는 이런 네 가지 역할의 대립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보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리만을 쫓은 결과가 현재의 위기라고 본다. 우리는 더 저렴한

물건과 더 많은 투자이익을 위해서 더 낮은 임금과 불평등, 환경 파괴, 공공의 도덕 파괴를 선택한 것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탓할 때, 우리 자신부터 잘못된 소비와 투자를 행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 가지 역할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과 기술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방법 역시 개별 국가 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

(We are all going to hell in a shopping basket)

2012.01.16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를 세계 금융과 거기서 일하는 임원들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임금 탓으로 돌리는 일은 너무 쉽다. 더 깊이 있는 통찰에 의하면 지금의 위기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노동자와 시민을 이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가지 역할(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시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얻게 되는 효율적인 거래는 증가하는 대신 노동자와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던 능력은 줄어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이다.

현대 기술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걸쳐, 가장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여 최고의 이익을 얻게 해준다. 소비자와 투자는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불평등의 확산을 대가로 얻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물건은 낮은 임금을 주는 회사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공동체의 핵심인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한 대가이기도 하다. 발전된 기술은 가난한 국가에서 빈약한 환경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저렴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하도록 해주었다.

공공의 도덕을 해친 대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높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까닭은 생산자들이 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고용하여 일주일에 7일씩,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나 시민이기도 한 우리들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이런 결과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명의 개인이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선택을 보류하는 것은 효과도 없으며, 불가능하다.

노동자와 시민으로서의 요구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체도를 만드는 것이다. 법과 규칙은 일자리와 임금, 공동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민주적 체도를 훨씬 능가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공동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은 오직 국경 안에서만 해당된다. 하지만 소비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은 손쉽게 국경을 초월한다. 국가가 그런 거래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개별 국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이다. 환경 파괴는 전 세계적 문제이다. 또한 높은 비용을 피해서 일자리와 사업체를 옮기겠다고 위협을 일삼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법은 간접적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더 친기업화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금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거래를 위해서 민주적 체도를 훼손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기업이 돈을 대주는 홍보, 캠페인, 로비스트의 영향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기관, 의회, 감시기구, 국제기구를

뛰어넘는다.

그 결과 소비자와 투자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기후 변화는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금융이나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으며, 전적으로 공모했던 불안정한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2012.03.15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불평등의 덫(The Inequality Trap)”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불평등은 더 이상 참신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 년 간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와 함께 불평등도 우리 사회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 간 능력의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았다면, 지금은 세계 경기침체의 근원이자 새로운 체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고 있다. 1% vs 99%의 전선이 부각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의하면 1952년부터 1986년까지는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던 금융위기 직전 2007년에는 전체 소득의 18.3%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득 집중도가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던 때가 또 있었는데 바로 대공황 직전인 1929년에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18.4%를 기록했었다. 대공황과 금융위기가 직전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공통점이다.

아래 글에서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어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소득이 배분되어야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광범위한 민간 수요가 창출되며, 민간 수요가 존재한다면 공공부채를 줄여도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며, 투자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교수를 대표로 하는 기타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

라잔 교수는 자신의 저서 ‘폴트라인(Fault Line)’에서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해 신용거품으로 대처한 정부 정책이 금융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참고로 그의 저서에 담긴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진보가 일어나면서 숙련노동자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가난한 사람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단시간에 하위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신용 창출을 택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라잔 교수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이전에는 은행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하위층에 대해서까지 대출이 확산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연방주택저당회사 패니 매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이 하위층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보증 지침, 불입금을 낮춘 새로운 모기지 상품들은 모두 공공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모기지 상품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기에 약 4%였던 것이 금융위기 직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다. 이후 엄청난 집값 폭등이 일어났고,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1%에 집중된 부를 99%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1%의 탐욕에는 규제를 가하고, 99%의 호주머니는 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면서도 이 간단한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불평등의 덫 (The Inequality Trap)

2012.03.08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소득 불평등이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면서 학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970년대의 두 배로, GDP 8%에서 최근 20% 가까이 증가했다.

불평등의 원인은 윤리적,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들은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거시경제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이 많이 나타났다. 자본주의는 유효수요의 상승적인 위기를 유발한다. 소득이 일부에게 집중되면 과잉 저축이 일어난다. 부자가 될수록 많이 저축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수요를 찾기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고 이는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

IMF 수석경제학자로 일했던 시카고대학교의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교수는 최근 발표한 그의 책 ‘폴트라인(Fault Line)’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한다.

라잔은 미국 상위층에 대한 심각한 소득 집중도가 중하위 소득층에게 지속불가능한 대출을 권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위해 주택 부문에서의 보조금과 대출 보장, 통화팽창정책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부채 폭발도 있었다. 이런 요인들은 소비를 방해하고, 더 깊은 부채로 빠지게 만든다. 금융의 공격적인 중개방식을 통해 고소득층은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다. 이는 지속불가능한 방식이며, 2008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각각 자신들의 책 ‘끝나지 않은 추락(Freefall)’과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shock)’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마이클 쿰호프(Michael Kumhof)와 로맹 랑시에르(Romain Ranciere)는 소득 집중도와 금융위기의 관계에 대해 수학을 통해 설명한다. 근본이 되는 모델은 다르지만 케인지안 역시 소득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투자보다 지나

치게 과잉된 저축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재정지출과 저금리를 통해 경기 회복을 하고자 한다. 수출에 유리하도록 고환율 정책도 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문제는 만성적으로 남는다. 게다가 공공부채가 적자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거나 이 미 금리가 0%에 가깝다면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현실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 미국은 저축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게 아닐까?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본다면 유효수요가 적은 게 아니라 과잉 소비가 문제인 게 아닐까? 높은 고용수준과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소득층이 다른 모든 이들의 수요에 자금을 공급해준 것이다.

과도한 소득 집중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신용거품과 붕괴가 다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가 생긴다. 기업들은 불충분한 수요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계속 상위층에 집중된다면 어떻게 국내 수요가 강화될 수 있겠는가?

2012년 미국 경제는 여전히 일상적이지 않은 통화팽창정책과 지속불가능한 재정정책에 의지하고 있다. 소득집중도가 줄어든다면, 광범위한 민간 소득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침체를 우려하지 않고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2012.06.11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에 투자해야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층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나 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상위층의 엄청난 소득은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비판한다.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기업의 발전보다 주주의 배당을 먼저 고려하고, 약탈적 금융대출로 서민들의 돈을 탈취한 결과라 꼬집고 있다. 또한 지금의 시장경제는 정치에 의해 움직이고, 정치는 돈에 의해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2012.06.05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린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미국인들의 사례를 많이 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통계수치들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수치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미국은 유럽보다 기회의 평등도가 낮다. 이 자료가 존재하는 선진국 중 가장 낮다.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 불평등도가 가장 높으며, 이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한 소득 중 93%를 미국의 상위 1%가 가져갔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 건강, 기대수명 등에서도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은 상위층으로 집중되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으며,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상위층이 높은 소득을 얻게 된 이유가 사회에 기여한 대가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경제를 파산 직전까지 끌고 갔던 은행들조차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다.

이 외에도 상위층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독점력을 키워서 자산을 모으고,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에 손실을 가져온다. 정부와의 정치적 커넥션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팔 때는 비싸게 팔고(약품류) 정부에게 살 때는 싸게 사는(광물 채굴권) 식이다.

금융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약탈적 대출과 과도한 신용카드사용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 빈곤층을 직접 희생하여 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상위층이 부자가 되면 모든 이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상한 이론인 적하효

과가 작동했다면 좀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97년과 비교해서 실질 소득은 더 낮아지면서 지금 대다수 미국인의 삶은 나빠졌다. 성장의 모든 과실은 상위층에게 돌아갔다.

미국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이들은 빈곤층과 중산층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분배되는 과이의 비중은 줄었지만, 부자들과 슈퍼부자들 덕분에 과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0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이 때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 성장속도는 줄었다.

불평등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상위층의 자기 이익 챙기기는 경제를 왜곡시켰다. 물론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였지만, 미국에서 시장은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치는 돈이 만든다. 부정이 많은 선거자금 모금이나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전문 인사가 그런 사례이다.

과산법은 금융파생상품에는 특권을 주지만, 정작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받아야 할 권리와는 상관없이 은행들의 배를 불리고 수많은 빈곤층을 가난하게 만든다. 돈이 민주주의를 이기는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GDP 성장률과 함께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시장경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불평등을 줄여가고 있다.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불평등은 낮은 성장률과 비효율을 가져온다. 기회의 부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빈곤층과 심지어 중산층들까지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 상위층은 공공 서비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세금이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를 원한다. 이는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의 투자를 줄이면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공공지출의 감소, 저임금, 실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IMF와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UN의 전문가 위원회에 의하면 불평등은 경제적 불

안정을 가져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불평등이 미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극단적 수준에 도달하면 통화 정책부터 예산 배분까지 모든 공적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모두를 위한 정의”가 숨 쉬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의가 숨 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하기에 늦지 않았다.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2012.02.24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요하네스 저팅(Johannes Jutting)의 "세계 중산층의 진출(The Middle Class Goes Global)"을 요약 소개한다. 요하네스 저팅은 OECD 개발국(Development center)에서 빈곤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산층을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했다. 이에 의하면 약 20억 명이 세계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에는 49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 중 최대 39억 명이 정도가 신흥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팅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저항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당연한 변화라고 본다. 중산층은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더 책임감 있는 정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요구도 커질 것이며,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은 그런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런 변화는 신흥국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흥국 경제발전 모델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며, 일자리의 부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국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 나

가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계 중산층의 진출 (The Middle Class Goes Global)

2012.02.21

요하네스 저팅(Johannes Jutt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세기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를 고무시켰다. 21세기의 세계는 경제성장의 형태가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남반구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하여 잠재적으로 힘있는 중산층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의 중산층의 꿈이 실현될지 혹은 악몽이 될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약 80개 개발도상국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에 비해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증감과 상관없이 중산층 시민의 불만은 커지고,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무역산업장관인 모이세스 나임(Moises Naim)은 “중산층의 새로운 세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임금 삭감과 실업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태국,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의 저항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슨 일인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시아와 남쪽 나라들에서의 높은 성장은 수출과 천연자원 개발 덕분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축복은 저주로 변했다. “일부 사람들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고 말했던 중국의 전 공산당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놀라운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를 가져왔다. 하지만 스스로 주장했던 “조화로운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불평등의 심화, 시민 참여의 부족, 정치적 무관심, 좋은 일자리의 부족,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은 최근 신흥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튀니지와 태국에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국 국민들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호미 카라스(Homi Kharas)는 오늘날 세계의 중산층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한다. 대략 20억 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고르게 퍼져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은 총 49억 명이 될 것이다. 이들 중 32억에서 39억 명 정도가 신흥국 국민이며 세계 인구의 65~80%를 차지할 것이다.

중산층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 이들은 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한다. 이들은 더 책임감 있는 정치를 원한다. 지금 불고 있는 저항의 물결은 이러한 요구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신흥 중산층의 대부분은 한 번의 소득 충격만으로도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도의 고용보장제도, 가나의 국민건강보험, 레소토의 연금제도들은 신흥국 중산층에게 필요한 유익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둘째,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의 노동력은 30억 명에 이르는데, 이 중 3분의 2만이 공식적 고용 상태이다. 인도는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학력자 중 거의 30%가 실업 상태이며, 이는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률과 겨우 8%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신흥국에서의 교육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더 좋은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정책을 개선하고 국내의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갖는 국가에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적 신뢰가 커지며,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국민이 탈세의 유혹을 접한다. 반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이 수치가 10분 1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랍의 봄이 증명하듯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채 복종만을 강요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사회적 미디어는 시민들의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케냐의 우샤히디(Ushahidi)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해주었다. 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주었다.

세계 중산층의 증가는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바꾸고 있다.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고, 시민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단합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쇠이다.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2012.06.26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의 감세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세계경제가 다시 흔들리면서 그린스판(Greenspan) 전 연준(Fed) 의장조차 “전 세계적 불황이 우려된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자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회복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부를 재분배하여 중산층에게 돌려줌으로써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요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과감한 정책들, 1)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 2) 실업 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제정, 3)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 4) 대형 사회 인프라 구축 계획, 5) 강화된 조세 제도, 6) 금융 규제 제도 등을 들고 있다.

어찌 보면 현재의 위기가 실질적으로 1929년의 대공황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1929년 당시와 달리 2008년 이후 신속하게 취해진 각종 구제 금융과 경기부양책이 단지 위기를 지연시킨데 머무른 것이었다면,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들도 명실상부하게 1929년 이후에 실행되었던 대규모 조치와 견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해법들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간의 경기 자극정책’ 이후 소란스런 ‘긴축’과 ‘통화 완화’정책이 사실상 전부였다.

특히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명문화하여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여 ‘노동자 권리장전’이라고 불렀던 1935년의 ‘와그너법(Wagner Act)’을 위기 극복의 주요 대책으로 거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립성을 가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면 이들이 이윤의 적절한 분배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서 시장에서 높은 구매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와그너법은 기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임금 깎고 파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권을 보장해줘서 임금 올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불황 타개책이라는 것이다.

아래 소개하는 로버트 라이시의 글은 1929년 대공황과 그를 극복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에서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간결하면서도 복합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

경기회복 여부는 중산층의 구매력에 달렸다 (Recovery depends on middle-class spending power)

2012.06.22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샌프란시스코 게이트(www.sfgate.com)

현재 미국 경기 회복세가 매우 부진한 원인은 단순히 유럽의 부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구나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너무 높다거나, 빈곤층에게 주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 관대하다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심지어는 오바마 행정부가 케인즈주의적 경기 부양정책을 충분히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진정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회복부진의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것은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만큼 충분히 소비 할 현금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2008년 위기 이전에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부채를 동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연준에서 발표한 소비자 금융조사 결과를 보라. 중위 가구 소득이 2007년 49,600 달러에서 2010년에 45,800달러로 7.7%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모든 소득은 1% 부유층에게로 집중되어왔고, 그래서 부자가 된 그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은 나머지 소득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아서 투자한다.

2차 대전 후 30년 동안에는 미국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미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 부진이 미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세계화와 자동화는 중위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을 높였다. 사용자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규제가 풀려간 금융시장은 실물경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부분 가정에서 임금은 고통스럽도록 조금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가정 소득을 지탱하기 위해 임금 노동의 대열로 뛰어들었다. 실직을 하게 된 가정들은 주택 값이 올라가고 있었기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부채를 늘려갔다. 그때 주택거품이 터졌던 것이다. 연준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주택거품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중위 가구의 순자산 가치는 거의 40%가 떨어져서 199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전형적인 가구의 자산은 주식이 아니라 주택인데, 2006년 이후 주택가치가 3분의 1 까지 떨어졌던 것이다.

미국경제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미국 중산층들이 여전히 바닥에서 탈출할 만큼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뒤로 미끄러지지 않기만 바랄 뿐 경기회복의 단순한 해법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중산층들이 훨씬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어떻게?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920년대에도 전 기간 내내 소득은 최상층에게 집중되었다. 1928년까지 1%부자들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4%까지 올라갔다. (2007년에 다시 1% 소득 비중은 23.5%에 근접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거품이 터지고 대공황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때 미국은 사용자들에게 조직노동자들과 신뢰의 협약을 요구하는 와그너 법(Wagner Act)*을 만들었고 사회 안전망과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공공사업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과 시민보전단(Civil Conservation Corps)**을 만들었다. 최저 임금제도를 만들었다. 금융에서는 증권법과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었다.

1941년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신체 건강한 미국 성인들이 대규모 동원되었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에 따라 퇴역하는 수백만의 군인들을 대학에 보냈다. 고등교육을 받은 거대한 층이 형성된 것이다. 1956년 전미주계간방위고속도로망법(National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 Act)과 같은 법으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투자가 시행되었다. 부자에 대한 세율은 1981년까지 최소 70% 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그 결과 1957년까지 1%부자의 소득비중은 전체 소득 가운데 10.1%로 떨어졌다. 세계사에서 가장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중산층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소득이 분배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수준 이상의 분배 몫을 주장하기위해, 2차 대전 이후 30년 동안 중산층이 보유했던 협상력 수준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기 바닥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각주]

*와그너 법(Wagner Act):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다. 1933년에 제정된 노동권을 보장한 전국산업부흥법이 오히려 노동분쟁을 촉발하자 1935년 상원의원 R.F.와그너가 제안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였다. 이 법률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자 권리와 노동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다.

** 공공사업국(PWA; Works Projects Administration)과 시민보전단(Civil Conservation Corps): 1933년 6월 공공사업국이 발족되어 도로와 학교 건물과 같이 단순한 토목 건설 공사부터 댐, 전함, 잠수함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담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크타운(Yorktown)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항공모함도 PWA 프로젝트였다. 또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로 시민보전단(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조직해 조림, 산불감시, 산림휴양 공간 조성 등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3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오늘날 애플래치안 트레일과 요세미티 옐로스톤 숲 등 아름다운 국립공원은 이러한 사업의 산물이다.

***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미국의 퇴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1944년에 개시한 제반 법률과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돌아온 퇴역군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미국의 노동인구(work force)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2012.09.28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새사연이 여러 번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이다. 불평등에 저항한 세계적인 운동이 바로 월가 점령운동이었다. 불평등의 한국 버전은 '재벌 독식' '재벌 나 홀로 성장'이었으며, 불평등 저항운동과 월가 점령운동의 한국 버전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선 경제 성장 - 후 불평등 해소’라는 도식을 내놓기도 했다.(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경련이 요청한 연구용역 보고서)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들은 반대의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해야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해야 성장이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티글리츠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불평등은 낮은 성장률과 비효율을 가져온다. 기회의 부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빈곤층과 심지어 중산층들까지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 상위층은 공공 서비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세금이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를 원한다. 이는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의 투자를 줄이면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새

사연 번역 소개 : <http://bit.ly/Osyp8q>

이탈리아의 경제 분석가 카를로 밀라니(Carlo Milani) 역시 소셜유럽저널(Social Europe Journal)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금 유로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간명하게 주장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를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실업률이 아니라 불평등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불평등을 줄여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경제 민주화를 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18대 대선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가장 큰 후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불평등이 미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극단적 수준에 도달하면 통화 정책부터 예산 배분까지 모든 공적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모두를 위한 정의”가 숨 쉬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의가 숨 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불평등,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Income Inequality in the Eurozone: What are the effects on Growth?)

2012.09.26

카를로 밀라니(Carlo Milani)

소셜 유럽 저널(Social Europe Journal)

스티글리츠(Stiglitz)의 최근 저서(『The Price of Inequality』)에 따르면, 불평등 확대는 지난 20세기 미국경제와 금융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한다. 2007년에 미국인 0.1%의 소득이 90%미국 시민들 평균보다 무려 220배나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가정들의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두 가지 거품을 허용했는데 닷컴 거품과 주택 거품이 그것이다. 미국 가정들은 은행에서 신용을 얻기 위해 (주택이라는) 담보를 제공했지만 주택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져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미국에서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단적인 빈곤층 가구는 1996년과 비교하여 두 배가 늘어 150만 가구에 달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 유럽의 가정은 미국 보다는 좀 더 분별 있게 표준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 안전망이 강력하며 소득 불평등도 훨씬 덜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소득 불평등의 표준 지표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를 고려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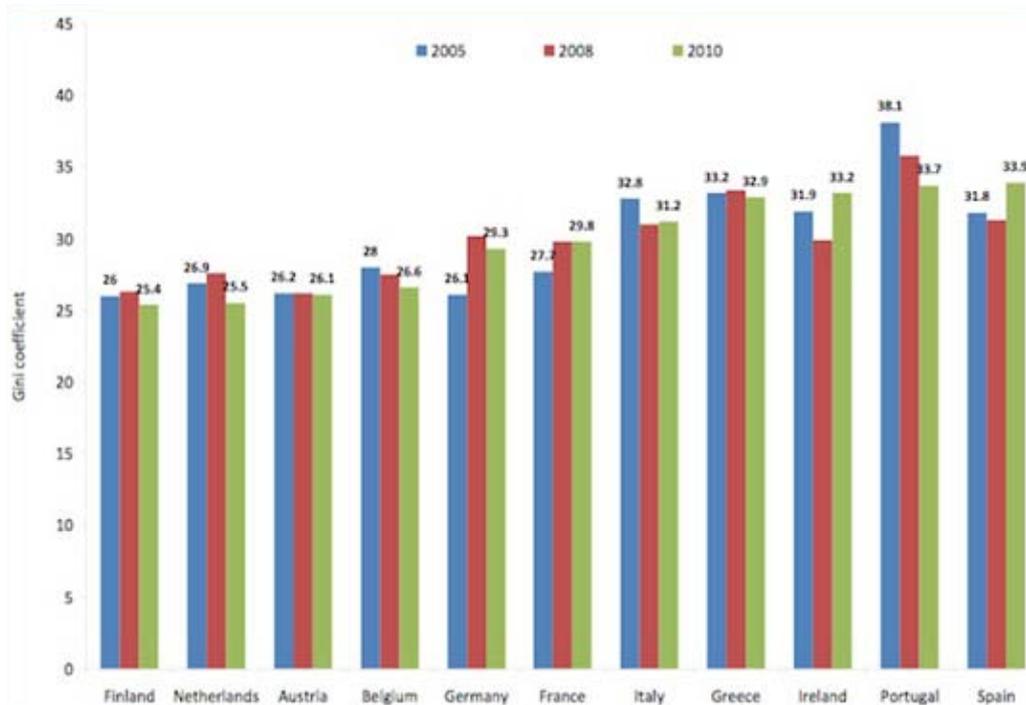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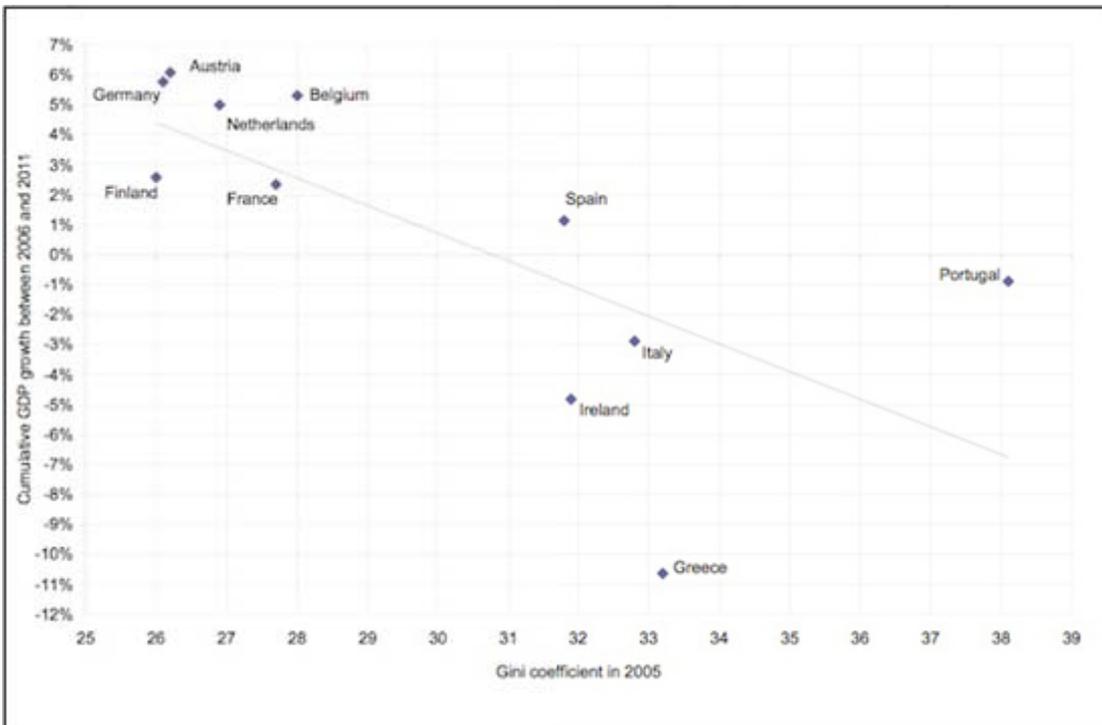


그림 1(Figure 1)은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가장 최신 년도인 2010년의 유로 지역 주요 국가들 지니계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지

니계수가 악화된 최상위 국가들이다.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불평등 정도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벨기에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중간 수준이다.

불평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2(Figure2)에서 2005년의 지니계수와 2006~2011년 동안의 누적 경제성장률사이의 분포도를 표시해보았다. 지니계수와 성장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여 불평등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0.69의 상관도)



우리는 북유럽 국가들이 그림의 왼쪽 위에 분포하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이 오른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남유럽에서 국가 부채가 늘고 성장률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그림은 더 극단적으로 나빠졌을 것이다.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남유럽 구제 금융에 개입하고 있는) 트로이카(ECB, EU, IMF)가 남유럽 국가들에서의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고 긴축정책에만 매달릴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성장률을 올리고 세금징수를 늘리며 사회적 혼란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Aizenman Joshua and Yothin Jinjark (2012), “Income inequality, tax base, and sovereign spreads”, VoxEU.org, 30 June.
- Stiglitz Joseph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Allen Lane Edition.

지금 시대 행복의 조건은 평등

2012.10.23 | 이수연_세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우리는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경제성장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가?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는 이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이런 의문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는 대체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주 기본적인 요구들이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사람들의 행복은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의 행복은 소득의 절대값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스키델스키 교수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성장이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며, 지금과 같은 양극화의 상황에서는 평등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평등은 사회안전망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고, 동료 간에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국민총소득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지수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데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논의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행복은 평등이다 (Happiness Is Equality)

2012.10.19

로버트 스킨델스키(Robert Skidelsky)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부탄의 국왕은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의 국민총소득(GN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행복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유행인걸까?

왜 정부가 경제성장을 덜 강조해야 하는지는 경제성장이 어려울수록 잘 알 수 있다. 올해 유로존은 전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영국 경제는 긴축 상태에 들어갔으며, 그리스 경제는 몇년 동안 위축되어 있다. 심지어 중국도 침체에 들어설 전망이다. 성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안되는 걸까?

경제성장이 회복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강조하는 태도에 대한 진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성장은 덜 중요한 미래 가치가 되고 있다.

성장을 강조하던 태도가 변하게 된 첫번째 요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이다.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이전과 같은 속도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1970년대 사람들은 성장을 계속 하기에는 자연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식량의 고갈이나 재생불가능한 천연 자원이 걱정거리였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2006년 스텐보고서(Stern Review)가 강조했듯이 미래에 뜨거워진 지구에서 튀겨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만 한다.

신기하게도 이 토론에서 한가지 금기시되는 내용은 인구에 관한 것이다. 인구수가 적을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험은 줄어든다. 하지만 선진국 정부는 자연스러운 인구의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더 빨리 성장한다.

최근 들어 성장이 가져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드시 더 많은 성장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성장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시작은 몇십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1974년 경제학자 로버트 이스터린(Robert Easterlin)은 "경제 성장은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가? 몇가지 실증 증거들"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한다. 많은 국가에서 1인당 소득과 스스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상황에서 그는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낸다.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최소 소득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행복과 1인당 GNP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GNP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매우 부족한 지표라는 뜻이다. 이후 대체 지표를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972년 두 명의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와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순경제적후생(Net Economic Welfare)이라는 지표를 도입한다. GNP에서 환경오염과 같이 나쁜 생산물을 제외시키고, 여가와 같이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추가한 것이다.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더 적은 노동을 하는 사회가 더 많이 일하고 따라서 GNP도 높지만 여가를 덜 즐기는 나라만큼 후생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삶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질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양과 질을 어떻게 종합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는 경제학보다는 윤리학의 문제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양을 측정하는 후생 지표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또 다른 발견이 있다. 한 국가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덜 행복하다는 것이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보된 경우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그들의 절대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열등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결국 후생은 성장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달려 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소득의 성장이 아니라 중위 소득의 증가, 다시말해 일반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 1명은 관리자로 1년에 15만 달러를 번다. 다른 9명은 노동자로 1년에 1만 달러를 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만 5천 달러이다. 하지만 90%는 1만 달러를 벌 뿐이다. 이런 식의 소득 배분에서는 성장이 되어도 일반인의 후생이 높아질 리가 없다.

특수한 사례를 든 것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부자들의 사회에서 평균 소득은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했다. 즉,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하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가져갔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평등이다.

더 많은 평등은 사회안전망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고, 동료 간에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끊임없이 자극당하면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우리는 터보엔진을 단 아빠와 호랑이 같은 엄마가 아이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딱딱한 사회에 살고 있다.

오히려 19세기에 살았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더 훌륭한 시민의 소양을 보여준다.

"나는 다른 이를 짓밟고 밀어제끼며, 다른 이와 충돌하고 싸우는 방식을 통해 유지되는 삶을 바라지 않는다. 사회적 삶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좋은 상태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 나가기를 강요당하며 뒤쳐질까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다."

부탄의 왕을 비롯하여 수량화할 수 있는 부의 한계를 깨달은 많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